

## 유로 존 재정 위기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

안두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최근 유로 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지나친 복지 예산 팽창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한국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EU와 유로 존의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외형적 현상만을 기초로 한 주장이다.

단일 경제권의 지속가능성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 장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유로 존에는 회원국들 간의 교역수지나 재정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열악한 경제수준에서 출발한 남유럽 국가들의 지속적 교역수지 악화와 성장을 저하 및 실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와 재정 적자 누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적자의 대부분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부자 회원국들의 자본으로 메웠다.

더구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협력 대신 오히려 긴축을 강력히 요구하여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를 초래, 새로운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는 그동안 대부분 유동성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기적 조치들로써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회원국들 간의 교역수지나 재정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조정 장치와 함께 회원국들 간의 실물분야 불균형 해소 즉, 성장 잠재력과 성장 과실의 재분배를 통한 “유럽적 가치의 연대” 유지와 “동등 성장을 위한 연대”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2012년 4월

### 자체가속적인 정부의 재정 적자

유로 존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17개 국가들이 결성한 단일 경제권이며 EURO-17로도 불린다. EURO-17의 재정 적자는 6.6%로 미국의 10.6%나 일본의 6.8%보다 양호하다. 정부 부채 역시 GDP의 83.1%로 95.2%를 기록한 미국이나 197.6%를 넘어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이상 2010년 말 현재). 그럼에도 유로 존이 세계 경제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일 경제권인 유로 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적자의 평균치가 아니라 회원국들 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불균등한 분포 및 몇몇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의 누적에 있다.

단일 경제권인 유로 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적자의 평균치가 아니라 회원국들 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불균등한 분포 및 몇몇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와 대외 부채의 누적에 있다. <표 1>에는 위기의 핵으로 불리는 남유럽 국가들의 2007년과 2010년 재정 수지와 정부 부채 및 그 변화 추이가 정리되어 있다.

**<표 1> 남유럽의 재정수지 및 정부 부채 증감률**

(단위: GDP 비중, 변동률은 %p)

	재정수지			정부 부채			이자 부담률		
	2007	2010	변동률	2007	2010	변동률	2008	2011	변동률
그리스	-6.5	-10.6	-4.1	107.4	144.9	37.5	5.0	6.9	1.9
포르투갈	-3.1	-9.8	-6.7	68.5	93.3	25.0	3.0	4.2	1.2
스페인	1.9	-9.3	-11.2	36.2	61.0	24.8	1.6	2.2	0.6
이탈리아	-1.6	-4.6	-3.0	103.1	118.4	15.3	5.2	4.9	-0.3
유로 존	-0.7	-6.2	-5.5	60.7	83.1	22.4	n.a.	n.a.	n.a.

자료: Eurostat, Imbalance Scoreboard 2011 및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tatistical Annex of European Economy, Autumn 2011

<표 1>에서 보듯이 문제가 있는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는 이 기간에 모두 악화되었다. 2010년 그리스의 재정수지는 10.6%의 적자를 나타냈고, 정부의 부채 비율은 무려 144.9%에 이른다. 2007년에 아직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던 스페인은 2010년에 와서 9.3%의 적자를 기록, 시점 간 비교에서 가장 큰 폭의 재정수지 악화를 보이고 있다.

<표 1>의 마지막 칼럼에 나타난 이자 부담률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GDP의 무려 6.9%를 이자 갚는데 쓰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6.9%를 넘어야 겨우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단 가속이 붙은 정부의 부채 증가 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은 당분간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 복지 지출과 재정 위기의 상관관계

자료에 의하면, 1995-2005년 사이 EU 국가들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26% 내외로 거의 안정적이었다.<sup>2)</sup> 또한 2005년 이탈리아를 제외한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비 지출은 중북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10년에 와서 상황은 달라졌다. <표 2>에서 보다시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URO-17 평균인 17.6%보다 여전히 낮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EURO-17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팽창했다. 특히 그리스는 20.8%를 기록, 가장 높았던 프랑스를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정부의 인기 영합주의와 과도한 복지 혜택의 확장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

**<표 2> 정부 지출 사회복지비(직접 이전지출 제외)의 GDP 비중** (단위: % 및 %p)

국가	2005	2010	변화%p	국가	2005	2010	변화%p
벨기에	15.8	17.2	1.4	이탈리아	16.9	19.2	2.3
덴마크	16.3	17.0	0.7	스페인	11.6	15.3	3.7
프랑스	17.8	19.6	1.8	포르투갈	14.4	17.0	2.6
독일	18.5	17.3	-1.2	그리스	16.5	20.8	4.3
EU-27	15.6	17.0	1.4	EURO-17	16.3	17.6	1.3

자료: Social benefits (other than social transfers in kind) paid by general government, % of GDP, Eurostat, Code tec00026을 바탕으로 자체 작성.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변화율에서도 확인된다. 즉, 비교 대상국들의 복지비 지출 속도가 독일처럼 감소하거나 매우 완만하여 EURO-17이 평균 1.3%p 증가한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2.6~4.3%p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자료만 본다면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이면에는 과도한 복지비 지출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EU와 유로 존이라는 단일경제 공동체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무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과 심화되는 금융 연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인기 영합주의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때문인가?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만 집착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국가연합으로서의 EU와 유로 존이라는 단일통화권과 같은 특수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특수성이란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EU라는 국가연합과 유로 존이라는 단일통화권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이 어떻게 남유럽 회원 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는지 살펴보자.

EU의 단일시장 형성과 또 1999년 유로 존 출범으로 시장이 대폭 개방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환리스크가 제거되었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남유럽 국가들에게 시장의 완전 개방은 교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북유럽 유로 존 회원국들이 2007년 세계 금융

EU의 단일시장 형성과 또 1999년 유로 존 출범으로 시장이 대폭 개방되면서 회원국들 간의 환리스크가 제거되었다. 이로써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기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남유럽 국가들에게 시장의 완전 개방은 교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유로 존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지속적 교역수지 적자에도 무역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율 조정 메커니즘은 아예 없다.

또한 단일 경제권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통제할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고 주어진 것은 다만 재정 정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다.

위기 이후 교역수지 흑자를 보인 반면, 남유럽 위기 국가들의 교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 왔다.<sup>3)</sup> 유로 존은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지속적 교역수지 적자에도 무역 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환율 조정 메커니즘은 아예 없다. 또한 단일 경제권에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통제할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고 주어진 것은 다만 재정 정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다. 열악한 경제수준에서 출발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지속적 국제수지 악화와 성장률 저하 및 실업 증가는 필연적으로 복지 예산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때 해당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긴축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다. 그리고 차입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자본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오고 채권국들은 긴축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 이처럼 단일통화권으로서의 유로 존은 일단 위기에 직면한 회원국들을 구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은 가지지 못하면서 실물 분야에서 오는 불균형은 금융 분야의 연계 강화를 강요하고 이는 다시 재정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유럽 내의 채무국과 채권국들 간의 강한 금융 연계는 <표 3>에서도 확인된다. 남유럽 위기국가들에 대한 비유럽권 국가들의 채권 비중은 10.8%에 불과한 반면, 유럽 국가들의 비중은 89.2%에 달한다. 그 중 프랑스(32.2%), 독일(19.7%), 영국(10.5%) 등 3대 채권국의 비중이 62.4%이다. 이는 남유럽 위기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주로 유럽국가들 간의 채무-채권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대 자본 공여국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 유럽 국가들 간 부채와 채권 관계

(단위: 10억 달러)

	유럽						비 유럽권	합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소계		
그리스	12.6	21.4	55.7	3.7	1.2	120.8	10.3	131.1
포르투갈	25.4	35.9	25.7	3.9	88.5	196.7	7.8	204.5
스페인	100.9	177.5	150.9	30.0	-	643.2	98.7	741.9
이탈리아	73.7	161.8	416.4	-	39.8	837.5	101.6	939.0
합계	212.6	396.6	648.7	37.6	129.5	1798.2	218.4	2016.6
(%)	(10.5)	(19.7)	(32.2)	(1.9)	(0.6)	(89.2)*	(10.8)	(100.0)

\*여기에는 기타 24.3%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BIS, Detailed tables on preliminary locational and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at end-June 2011, October 2011를 기초로 자체 작성

회원국들 간의 강한 금융 연계로 채무-채권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와 달리 채무 국가의 재정 및 교역수지 악화를 억제할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채권국가 은행들이 ECB에서 자금을 싼 이율로 빌려 비싼 이율로 채무국가에 대출하여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나 긴축 일변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채무 국가들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sup>4)</sup>

### EU와 유로 존은 진정한 단일 경제권인가?

남유럽 국가들에서 교역수지 적자 - 낮은 경제성장 - 높은 실업 -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기존의 북유럽 경제 강국들의 경기는 2009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남유럽 위기 국가들은 경기 침체 및 수출 부진과 여전히 높은 실업으로 더 많은 사회보장 예산을 요구하고 이는 다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위기 국가들의 교역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를 자본시장 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함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떠한 실물 경제적 조치도 EU나 유로 존 차원에서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물 분야의 아무런 조치 없이 오직 자본 이전만으로 목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현 구도에서 회원국들 간의 거시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외국 자본의 유치가 절실한 남유럽 국가들의 투자 여건 개선과 개발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도 재정수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프랑스를 제외한 중북부 유럽 국가들의 총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 투자의 GDP 비중은 2% 내외, 그리고 EURO-17은 2.5%였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및 그리스는 각각 3.8%, 3.6% 및 2.8%로 이들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높은 복지비 비중 확대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총자본 형성이라는 투자적 지출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총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 지출의 GDP 비중 (단위 %)

국가	2005	2010	변화 %p	국가	2005	2010	변화 %p
벨기에	1.7	1.6	-0.1	이태리	2.4	2.1	-0.3
덴마크	1.8	2.2	0.4	스페인	3.6	3.8	0.2
프랑스	3.3	3.1	-0.2	포르투갈	3.0	3.6	0.6
독일	1.4	1.6	0.2	그리스	2.8	2.8	0
EU-27	2.3	2.7	0.4	EURO-17	2.5	2.5	0

자료: General government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of GDP General government, Eurostat, Code tec00022

이 외중에서 상당 정도의 해외자본은 부동산 개발에 투입되어 거품을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상으로 볼 때,

---

남유럽 국가들에서 교역수지 적자 - 낮은 경제성장 - 높은 실업 -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본격화된 것은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기존의 북유럽 경제 강국들의 경기는 2009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다.

---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지나친 복지 팽창보다는 오히려 EU와 유로 존의 기본 정신인 회원국가들 간의 연대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정 실패와 자본시장의 무한 개방화에 따라 투기 자본이 야기하는 변동성의 방어가 불가능하게 조직된 자본시장의 시스템 오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유로 위기는 EU 및 유로 존이라는 단일 시장 및 단일 통화권을 형성한 회원국들 간의 실물 측의 거시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조건으로 제시된 구조 개혁과 긴축 일변도의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긴축 일변도의 조치들로는 저성장 - 고실업 - 높은 재정 수요 - 재정 적자 누적 - 긴축 압력 - 저성장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결책은 있는가?

그 동안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있었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단기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전환하는 외에 부채를 50%까지 탕감해주는 등의 작업이 찬반 논의 끝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그리스나 포르투갈의 디폴트 위기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로 존의 통화 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수행하지만 재정 정책은 17개 회원국들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자본 이동이 완전 자유로워진 단일 통화권에서 국제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모든 부담도 결국 “재정 정책의 자율성”을 가진 개별 국가에게 지움으로써 과중한 재정 정책의 의무는 교역수지 적자와 함께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더욱 키우도록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부채 탕감, 상환 연기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의 조치로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유로 위기의 근본 원인은 회원국들 간의 거시적 불균형 때문이다. 그리고 불균형의 원인은 실물 경제와 분리되어 자체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투기적 자본 이동과 변동성이다. EU 차원의 공동 경제정책, 재정정책 및 실물경제와 분리되어 투기와 거품을 야기시키는 금융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sup>5)</sup>와 함께 재정 위기 시 민간 분야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럽 연대세(Euro solidarity tax)”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sup>6)</sup>

그리스는 물론 여타 남유럽 위기 국가들도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 존에서 탈퇴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루비니(Roubini)를 위시한 일부 식자들의 견해도 공감을 얻고 있다.<sup>7)</sup> 즉, 디폴트를 통해서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 것이 위기의 구조적 원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

유로 위기의 근본 원인은 회원국들 간의 거시적 불균형 때문이다.

그리고 불균형의 원인은 실물 경제와 분리되어 자체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투기적 자본 이동과 변동성이다.

---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EU나 유로 존 국가들의 입장에서 디폴트와 유로 존 붕괴를 감내하기는 힘들 것이다.

국가 부채의 증가와 저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유로 존 국가들의 40년에 걸친 분석에 의하면, 국가 부채가 GDP의 70-80%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가 부채 비율과 재정 적자 비율의 변동 폭이 클수록 GDP 성장에 비례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sup>8)</sup> 국가 부채의 절대적 규모나 비중도 문제지만 그 증가 속도가 특히 문제다. 1988-2009 OECD 국가들의 국가 부채 증가율은 112.8%, 벨기에나 네덜란드는 약 80%인 반면, 그리스나 포르투갈은 각각 180.9%와 190.3%를 기록, 같은 유로 존 내에서도 위기 국가의 증가 속도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sup>9)</sup>

### 해결의 열쇠는 회원국 간의 거시적 불균형 해소

국가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미치는 악영향은 민간 저축, 공공 투자, 총요소 생산성, 장기 이자율 등의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유로 존 재정 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그리고 이는 성장 궤도로의 진입을 의미하는데 장기적 위기 국가들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회원국들 간의 성장 잠재력과 성장 과실의 재분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같은 연대주의 원칙의 성패는 결국 위기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남유럽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높은 성장을 통한 재정 적자 해소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교역수지 적자에서의 탈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나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2011-2020년의 지역별 성장 예측에 따르면 아시아 신흥국 6.0%, 남아프리카 4.5%, 중동과 북아프리카 4.0%, 중남미 3.5%, 미국 2.5% 등에 비해 유로 존은 1.5%로 가장 낮다.<sup>10)</sup> 이러한 저성장에 긴축까지 겹치면 내수 부진과 세수 축소로 이어져 재정 위기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우더슈테트(Daudestadt)는 유로 존의 현 재정 위기 해결책으로 부국(富國)의 흑자와 민간 분야의 채권 축소를 통한 EU 회원국들 간의 성장과 부의 재분배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유럽의 결속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분배 과정은 부화뇌동(Herdentrieb)하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일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일 통화 및 재화시장에 합당한 경제 정책이지 단기적 유동성 지원이 아니다.<sup>11)</sup> 그의 주장 중 핵심은 시장을 통해서 불가능하면 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공공 이전을 통해서 범국가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로 존이 회원국 간의 균형 성장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

국가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미치는 악영향은 민간 저축, 공공 투자, 총요소 생산성, 장기 이자율 등의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유로 존 재정 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

중장기적으로 “유럽적 가치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등 성장을 위한 연대 (solidarity for collective growth)”가 필요해 보인다. 얼마 전 EURO-17 국가들 및 동유럽 6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로 플러스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유로 존 내지 EU 전체의 안정 여부는 재정 취약국의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성장 불균형의 해소 목적으로 맺어진 이 협정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후주 |

- 1) 이하에서 EURO-17은 유로화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 존 17개국을, EU-27은 2004년 확대 이전의 15개 회원국에 2004년 이후 주로 전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10개 국가들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던 유럽연합에 다시 2007년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 총 27개 회원국을 가진 EU를 지칭한다.
-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ennial Report on Social Services of General Interests”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s, SEC (2008) 2179, Brussels, 7. 2008, Figure 2.13 및 Table 2.2, p.28-29.
- 3) 유로 존 국가들의 교역수지를 보면(괄호 안은 10억 유로), 2011년에도 독일 (+157.0), 네덜란드 (+45.1), 아일랜드 (+43.7), 덴마크 (+11.1), 벨기에 (+11.0) 등 대부분의 북유럽 경제 강국들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반면 스페인(-47.2), 이탈리아 (-24.6), 그리스 (-20.8), 포르투갈 (-15.3) 등 남유럽 위기 국가들은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eurostat news release, euroindicators, 44/2012 - 16 March 2012, January 2012 참조.
- 4) Lenz, Rainer, “Crisis in the Eurozone, Financial Management without a Financial Policy”, Friedrich-Ebert-Stiftung, Perspektive, June 2011.
- 5) Lenz, Raine, ibid 및 Kampeter, Werner, “Internationale Finanzkrisen im Vergleich. Lehren für das aktuelle Krisenmanagement”, Friedrich-Ebert-Stiftung Internationale Politikanalyse, März 2011.
- 6) Hacker, Björn, “Europa: Sink or Swim? The German Approach to the Crisis May Prove to be Economic and Political Dynamite for the EU”, Friedrich-Ebert-Stiftung, Perspektive, July 2011.
- 7) Roubini, N. & Stephen Mihm, Crisis Economics, Penguin Press 2010.
- 8) Checherita, Cristina and Philipp Rother,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Series No. 1237, August 2010.
- 9) OECD, “Economic Outlook 2009”에서 발췌.
-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 2011.
- 11) Michael Dauderstädt, “Staatsschulden und Schuldenstaaten. Europa braucht ein neues Wachstumsmodell”, Friedrich-Ebert-Stiftung, WISO direkt, April 2010.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폴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2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